

변방으로 몰리는 호남정치...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이재명 대표 체제 2기 지도부에 광주·전남 국회의원 없어 민형배 의원 백의종군... “호남 4번 연속 좌절 당과 함께 숙고” 지역 안배 서삼석·신정훈 의원 등 거론...원의 강위원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호남 출신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이 대표의 당 내 인사가 대선 준비를 위한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힌 만큼, 최대 표밭인 호남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오는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영광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의 적극적인 ‘광주·전남 챙기기’도 기대되고 있다.

21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의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당 전략 강화를 위해 기존에 없던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조세와 예산 전문가를 정책위원회에 배치했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는 조선인 정을호, 박선원 의원이 임명됐다. 이들 의원은 상황실장도 겸직하게 된다.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재선의 이정문 의원이,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은 조선인 임광현 의원과 안도걸(광주 동남) 의원이 임명됐다.

조세 수석대변인과 함께 대변인에는 한민수의원과 황정아 의원이 모두 유입됐다. 국민소통위원장은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대돼 재선인 김현, 전용기 의원이 맡았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조선 김현정 의원을 임명했다.

법률위원장은 기존의 박근택(광주 광산갑)·이용우 의원과 함께 이태형 변호사가 새로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의원, 정무조정실장은 김우영 의원이 유입됐고, 박지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도 유입됐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당직 일부 인선을 마침에 따라 사실상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보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원내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3인의 서삼석(영암·

무안·신안) 의원 추천이 잇따르고 있고,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에서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의 추천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여성·청년에 대한 배려와 원외 인사에 대한 추천도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안배에 대한 당내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향이 전북 전주인 한준호(경기 고양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의 지역구는 수도권이며 지역과 별다른 연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영광에서 37.39%의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합(38.04%)과 불과 0.65%포인트 차이를 기록한 점도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보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호남 인사를 대거 요직에 앉혔고, 경우에 따라 지도부가 영광에서 상주하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때만 관심을 두는 모순적 공간이 되고 말았다”면서 “호남의 주권자들은 예전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마우면 ‘다른 당’을 선택하는 패턴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쪽 날개로 날아야 굳게 나아갈 수 있는데도 민주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다”면서 “저까지 포함해 4번 연속 호남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모두 좌절했다. 호남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이 함께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백의종군 자세로 일하겠다”면서 “지도부로 임명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을 두 배 세배의 치열함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청 “코로나19 재유행 이달 말 절정...엔데믹 과정”

위기단계 상향 없이 체제 유지 기저질환 고위험군 보호에 총력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진 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위기 단계 상향 없이 현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에는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지명미 질병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 표본 검사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이달 둘째 주 1366명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예년 정점 수준(지난해 8월 둘째 주 신규 확진 34만9000명)과 비슷한 규모로 이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유행은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접종률(65세 이상 41.3%)이 낮았던 점, 새로 출현한 변이인 KP.3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다행은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더 낮다.

지 청장은 “다음 주 정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실제로 발생 규모는 예상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며 “치료제 도입이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돼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여유분까지 안정적

으로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애초 다음 주 1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해 26일 17만7000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약국 등에 여유분까지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치료제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경우 이달 1~16일 국내 제조업체 10곳에서 325만개를 생산·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월(11만6000개)의 28배, 올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4월(110만개)의 3배 수준이다.

/연합뉴스

국토장관 “전기차 충전을 제한, 지자체 독자결정없게 함께 논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제한’과 관련,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층마다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경제적 탄소중립 실현, 계속운전이 필수적입니다.

- 더운 지구를 식히는 원자력 발전**
○ 무탄소 전원
- 전력수입 못하는 우리나라**
○ 에너지 수입 전면중단시에도 2-3년 전력생산 가능
- 원자력 발전 중단 시 신규건설 필요**
○ 대체발전소 건설기간 / 비용부담 필요

★ 계속운전 | 운영허가만료 원전을 안전성 검증 후 계속하여 운전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빛원자력본부